

# 기획예산처·중장기전략위원회, 산업 대전환 시기에 대응한 규제체계 및 교육제도 개편 방안 논의

- 선도형 혁신체계 전환을 위한 규제체계 혁신방안 논의
- 인구구조 변화, 산업 대전환 시기에 맞는 교육제도 개편방안 논의

□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(이하, 위원회)는 '26.6.19.(금) 「제6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」를 개최하였다.

### < 위원회 개요 >

- (기능)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(2012년~)
- (위원) 권오현 위원장(前삼성전자 회장),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
- (분과) ①혁신성장반(AI, 바이오 등 주요산업·경제), ②미래사회전략반(인구, 교육, 노동, 기후 변화 대응 등), ③거버넌스개혁반\*(정부혁신, 규제개혁, 균형발전 등) 등 3개
- \* (거버넌스개혁반, 5명) 차미숙 국토연 선임연구위원(분과장),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, 문병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,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,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

□ 금번 회의에는 산업 대전환 시기에 맞는 규제체계 혁신,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교육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.

- 권오현 위원장은 규제 혁신은 규제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일반국민,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장기적인 큰 성과보다는 규제혁신을 통한 작은 혜택이라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규제 혁신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.

- **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**은 시대 변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단일 성취도 위주의 결과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도전, 창의적 사고가 평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·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.
  - **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**은 대학교육을 지역과 산업이 연계된 지역 특화형 교육체계로 전환하고, 지방대학에서 정착 가능한 외국인 인재를 교육·훈련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.
  - 참석자들은 신산업 육성,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.
-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	책임자	과 장	박철건 (044-214-1610)
		담당자	사무관	어우주 (hidnwn@korea.kr)

